

# 제주인권지기

JEJU HUMAN RIGHTS WATCH

2000년 12월 27일(수)

제 13 호

발행처 : 제주인권지기

발행인 : 김 상 근

편집인 : 박 용 배

· 주소 : 690-031 제주시 삼도1동 804-3(301호) · 전화 702-5250 · 팩스 702-5251 · E-mail : rightscj@hanmail.net

## 연말연시, 인권단체 단식농성으로 보내

###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촉구, 임시국회 끝날때까지

지난 18일,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 23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작된 '인권 2대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이 이틀만에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한국통신 노조가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에 들어가 1만여명의 노조원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게 됨으로서 "한통노조와 금융노련의 파업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상황"이며 "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라는 인식과 "연말연시에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전제"속에 19일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28일로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이 12월 28일 시작되었다. 단식농성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 및 정비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인권단체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민주적 개혁의 추진을

다시금 약속받고 실종된 개혁입법의 위기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단식농성의 주된 목표이다.

또한 농성단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지지도 모두 철회할 것이며 국민과 더불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단체의 연합단식농성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폐지 및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 및 농성이 국회 회기 막바지에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인권활

동가의 단식농성에 매일 결함을 하며 임시국회 종료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되면 민주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인권 유관단체들의 움직임은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김대중령이 귀국을 하면서 두 가지 인권현안과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국보법에 대해 생색내기 개정 및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려는 정부 및 여당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해 왜곡적 해석까지 도입해 밀어 부친 '뉴 밀레니엄 축제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을 해는 자본이 노동에 대해, 제국주의 경제적 침탈이 제3세계에 대해 힘으로 밀어 부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유발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인권지기'를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격월간과 격주간에 대한 꾸준한 발송 요구로 올 초 340여부의 발송부수가 440여부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에 맞게 사업을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재정난 자체를 유발시키지는 않았지만 모든 단체들이 겪고 있는 고전적 고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후원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제주인권지기'가 보다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밀레니엄에도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 2000년 한국의 인권을 되돌아보며

‘새 천년’이란 요란한 치장과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기약하며 화려하게 막을 올렸던 2000년.

그 설레임과 희망찾기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졌는지 ‘인권’의 눈으로 2000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 신자유주의 회오리 바람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뒤덮었던 검은 구름의 실체는 바로 ‘신자유주의’로 압축될 수 있다.

IMF의 극복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은 자본의 유연화라는 본질을 감춘 채,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국민에게 집단적 최면을 걸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재편속에 최대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최근 보기 드문 강력한 투쟁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IMF 전후와는 달리 소위 ‘개혁’의 본질에 대한 간파가 이루어지면서이다.

현 경제위기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몰아 부친 자유화, 고용의 유연화는 철저히 노동자 희생 위에 이루어지면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

또한, 올해 ‘주5일 근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쟁취’ 요구는 노동조건 후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란 회오리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엄정 대처’를 외치며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 지난 여름 롯

데호텔,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표적인 예이다.

철저히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 ‘개혁’의 끝은 현 정부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전망을 떨칠 수 없다.

### 노벨평화상과 국가보안법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며 인권개혁을 다짐했던 김대중대통령의 약속은 이번이 우리에게 좌절감만을 남겨놓았다.

물론, 2000년을 장기수가 없는 해로 장식하며 출발했고, 6·15남북정상회담과 9월 2일 조건없는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복송조치,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은 분단의 벽을 허물며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김대중대통령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 뒷편에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는커녕 개정 흐름조차도 보수세력에 밀려 올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인권국가의 출발점이 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은 법무부와 인권철학이 부재한 정치세력에 의해 꺾기만 국가기구인 약체 인권위원회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국내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작년 단식농성으로 법무부안을 자동폐기시켰고, 올해에도 약체인권위원회를 거부하며 2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 실망은 이제 분노가 되어 화려한 수

사로 치장되어지는, 의지가 없는 김대중대통령의 ‘인권’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정권퇴진’ 구호의 재등장

한해살이를 지나오면서 ‘인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일들은 많았다.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난한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등 법률 자체의 한계나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인권흐름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문제에서 노근리나 SOFA개정협상에서 보여진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와 매항리 투쟁에 대한 탄압은 주권국가로서의 자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또한,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권보호는 올 한해에도 별 진전이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이 가로막히고 참정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방송출연이 중지당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제 김대중정부의 인권정책은 빛바랜 약속이 되었고, 희생과 고통만을 요구하는 ‘개혁’의 허울이 벗겨지면서 ‘정권퇴진’의 구호가 밑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게 바로 200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땅의 음울한 자화상이다.



# 국가보안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임시국회 최대쟁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제대로 된 인권 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및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법리적·현실적 모순을 극대화시키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좋은 기회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각계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변호사·교수, 현정권 첫 시국농성  
민변과 민교협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50년 냉전의 산물인 국보법은 연내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7조 3항과 같은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밝히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변호사와 교수가 농성을 벌인

것은 현정권 들어 처음이다.

###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민주화운동 원로 15인이 "김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라"며 "노벨상을 받는 시점에서 국보법 개폐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여야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우왕좌왕할 때, 13일 여야의원 95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인권위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최소한 여야의원

에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 인권시민단체대표 공동기자회견

김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 귀국하는 날, 연내 보안법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 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으나 귀국하는 김대통령은 두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 ▲ 이회창 총재, 보안법 유지 발언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회동자리에서 보안법의 오남용의 소지는 사실이지만 존재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며 존속입장을 밝혔다.

## ■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힌 남매의 마지막 인사 - 한총련수배자 장진숙씨, 동생 임종 못 지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중이던 대학생이 죽음에 이른 동생의 마지막길 조차 지켜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99년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장진숙(25) 씨는 지난 16일 임종을 앞둔 동생의 병상앞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장씨는 98·99년 홍익대 미대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맡았으며, 한총련대의원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보안법(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로 3년간의 수배생활을 해왔다.

장씨의 동생 재원(23)씨는 후두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 소식을 장씨가 전해들은 것은 지난 15일. 장씨는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지키고자 했지만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병원방문이란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홍익대 동료들은 사람들을 모아 응급실 입구를 지키고 16일 저녁 장씨를 동생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들여 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10여 명의 마포경찰서 보안과 형사와 의경들이 들이닥쳐 장씨는 동생의 눈앞에서 연행당했고, 다음날인 17일 동생은 결국 숨을 거뒀다. 주위 동료들은 "16일 장씨가 동생을 만났을 때 의식이 잠시 돌아왔으나, 연행 후 동생은 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동료들은 "보안과 경찰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항의하며, 경찰서와 서부지검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구로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를 받던 장씨는 체포 19시간만인 17일 오후 7시에 체포 취소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서부지검이 "오는 26일 경찰서로 장씨를 자진출두케 한다"는 학교 교수와 담당변호사의 다짐을 받고 구속신청을 보류, 석방했기 때문이다. 다시 동생 곁을 찾을 수 있었던 장씨는 19일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인권운동사랑방 제공)



### 4·3 계엄령 불법 논란, 일단락

4·3계엄령이 불법이었다는 제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 6개월여만에 항소심 공판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인수씨의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의 패소를 볼 때, 이인수씨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상기 제주지법원장)는 22일 이인수씨의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령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률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을 사이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계엄선포 당시 계엄법이 제정·공포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법령에 근거없이 선포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과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과 비상사태를 맞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등을 감안할 때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진 불법적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한 1심판결을 인정,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1997년 4월 1일, 제민일보 1면 머릿기사와 3면 해설기사

에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1999년 8월 24일, 이인수씨 이 전대통령과 자신의 명예

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999년 10월 6일, 1차공판 하루 앞두고 도내 18개 시민사

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손배소 철회 촉구

2000년 1월 20일, 3차공판 김종민기자 증인으로 나서 계엄령을 특별히 주목하게 된 계기 등 진술

2000년 3월 27일, 5차공판 김홍석씨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 생생히 증언, 4·3관련 법정 첫 증인

2000년 7월 20일, 1심 선고공판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김창보 부장판사)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2000년 12월 1일, 항소심 첫 공판 양측 더 이상 주장할 것 및 입증할 것 없다하여 변론 종결

2000년 12월 22일, 광주고법 제주부(김상기 제주지법원장) 항소심선고 원고의 항소 기각 결정

### 인/권/호/름

(2000년 12월 13일 ~ 12월 27일)

1.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15명, "김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12/13)
2.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 95명이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못 박고 인권위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인권위원회법 공동발의(12/13)
3.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12/13)
4.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12/14)
5.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진보넷 게시판에 성폭력 사례 16건 공개(12/14)
6. 경찰이 운영하는 시민·경찰 협력위원회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설치돼.
7.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설립 발기인대회 열려, 인권피해자들 "사건 마무리됐어도 인권피해는 여전히 지속중"이라고 호소(12/15)
8. 파주시 장파리 주민 등 2백여명, 민통선 내 사유지 215만평에 미군이 스토리사격장을 설치해 합법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9. 미국 정부, 노근리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상은 없을 것이며, 다만 기념물·장학금 설립등 온건한 조치 검토만을 한다고 밝혀(12/21)
1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12/22)
11.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권이 무시됨을 거부하는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출범식 가져(12/23)
12. 합병 백지화를 요구하며 7일째 파업중인 국민-주택은행 노조원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 시켜(12/27)



395 02 67



Minjok-Tongshin English Edition

[특집] [논문] [수필] [성명서] [캠페인] [대화의 풍경] [지표] [사건자료] [보  
고서] [칼럼] [서설] [교사] [문예] [광고] [특설] [특재] [특보] [특정] [특  
보]

편집시간 2001.01.07 01:06:59

남북공동선언 7월이하에 수속종결 이뤄지지!

### [춘평] 겨울을 잊은 뜨거운 가슴들

신년 벽두에 뜨거운 가슴을 느낀다. 매서운 추위가 동지들의 발걸음에 파사도늬로 바뀐다. 얼어버린 길 끝도 동지들의 그 손길에 녹아버린다. 추위를 꺾는 고통도 동지들의 격려 성명서로 사라지고 지지방문으로 이어진 동지들의 발걸음에 뜨거운 기쁨으로 꽃핀다. 뜨거운 가슴들은 해외에도 연대시위와 형의시위로 이어졌다. 목숨건 인권활동가들의 명동성당 단식농성은 그것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깊었다.



동지애를 실천한 인물들!

이 투쟁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이 걸어온 고난의 한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동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목숨을 건 각오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연한 투쟁자세를 보여주었고 자주민주통일세력들이 이 불개안 단결단합하면 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겨울을 잊은 뜨거운 가슴들. 이것이 동지애가 아닐까. 지나간 한세기 역사속에서도 아찔다운 동지들간에 이뤄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적지않다. 항일투쟁의 전선에서도 반미구국투쟁의 세월속에서도 동지애에 나타난 뜨거운 가슴들을 볼 수 있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규합된 동지들간의 뜨거운 사랑, 미제의 지배정책으로 반세기의 노예생활을 거치면서 자주만이 살길이라는 좌우명으로 투쟁해 온 동지들간의 뜨거운 사랑,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역사속에서도 동지들이 나는 사랑의 불꽃으로 신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변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비전향장기수 영웅들, 투쟁과정에서 민족의 체단에 목숨을 바쳤던 고귀한 애국열사들의 동지애를 함께 떠올린다.

우리 민족사에서 규정할 동지애란 무엇일까.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함께 가는 동지들간에 주고 받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동지애가 될 것이다. 민족의 대난국을 방해하고 분열과 혼란을 고수하는 세력들간에 이뤄지는 사랑은 동지애가 아니라 반역의 모리배들이 주고 받는 이해타산의 나눔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의 형제자매들이 불러온 <동지애의 노래>를 통하여 머심하게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리중순 작사와 성동준 작곡의 노래가 동지의 사랑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구비남오리/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법을 우러러 보네>라는 1절의 노래와 2절에서는 이어 <들위에 피워나는 꽃은 그 정성 피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겨래네/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법을 우러러 보네>

이제 겨울을 잊은 뜨거운 가슴들은 명동성당에서,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춘천, 영주등지로 전도될 것이며 이 뜨거운 동지적 사랑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려는 해 내외 동포들 모두의 가슴에 위대한 민족대단결의 꽃으로 승화될 것이다.

2001년 1월7일  
민족통신 편집인

### 알림...

\*1월7일 현재 11일째 단식농성  
[아래 사진은 명동성당 돌머리에서 7일 현재 1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옥외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오마이뉴스 공회석 기자 촬영]



11일째 폭설기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제지침을 촉구하며 명동성당 돌머리에서 단식농성중인 인권운동가들: 6일밤엔 농성자가 무려 44명으로 늘어났다. 목숨건 단식농성에는 장기수 어르신내들도 참여해 일요일 아침 성당을 출입하는 신자들을 위해 눈까지 치워주며 뜨거운 가슴으로 농성자들을 격려. 6.15남북공동선언이 공포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 목숨을 건 새해 벽두의 노상단식농성의 애아리는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어 세계양심들은 명동성당 농성장에 속리고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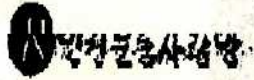
### 주요 뉴스...

\* [특]우리민족끼리 손잡으면 통일  
조선민족끼리 손 잡으면 통일은  
문제 없다 / 로동신문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 폭설에도 단식농성 11일째 계속 폭  
설속에도 단식농성은 계속된다 <여기  
는 명동성당> 농성단들의 치열한 투  
쟁 공동취재. 공회석,

\* 이승만 장기수, 이북에 소식요청 총  
북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단을 비롯 미  
송환 장기수 후원회(준) 및 총북지역  
간첩단 조직사건 대책위등 3개

\* [법정역력]정세분석과 실정개혁 법  
정 개혁을 위한 국민적 단결을 위해 대  
한 주권과적인 주권당을 다산이며 각  
년 초반기 실천계획들을 구체적?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3대 개혁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 및 제정되어야 합니다.

엄동한파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는 어둡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니, 바로 이 동토의 한복판에 이 나라를 너무나 오랫동안 휘감고 있는 괴물스러운 악법을 고치고자 온몸을 던져 목숨 걸고 단식에 돌입한 인권활동가들의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체감온도 20도를 넘는 한겨울 맨땅에서, 칼바람을 막을 벽도 없는 한데에서 단식을 하다가 하나 둘씩 쓰러져 병원에 실려져 나가고 있다는, 차마 제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 건국 이후 최초의 설득력을 수반한 정권교체라고 우리 모두 중심으로 동의하고, 환영한 것은 그분 한 사람의 정치사상이나 경제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개혁과 민주주의 신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이라는 형태로 세계가 우리 민족에게 표한 인사를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에 치러야 했던 엄청난 희생에 대한 작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수상소감에서 '민주와 인권'을 거듭 강조했고, 또한 그 상이 일개인의 상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받은 상이라는 것 또한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로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인권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이웃들이 동토의 얼음짱 같은 시멘트 바닥에 앉아 신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뽑아놓은 신임 여당 대표는 인권활동가들이 왜 이곳에 앉아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갔는지 설명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단지 '바쁘다'는 핑계로 묵살했습니다.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단식이라는 극한의 방법으로, 민족 공동체 모두의 생존과 관련된 악법의 철폐를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선 팔리고 그 일의 내용을 귀 담아 실피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구실이 정치지도자의 변이라면, 그를 그토록 바쁘게 한 우리 시대의 다른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권활동가들이 이 겨울에 이토록 처절한 극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우리 성직자들은 이 민족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치지도자들보다 조금 더 현명하고, 그들보다 조금 더 용기가 있었고, 그들보다 조금 덜 탐욕적이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삶보다 더 크고 자신의 삶보다 더 영속해야 할 민족의 앞날을 위해 살신투철의 자세로 온몸을 엄동한파에 내던지는 이 모습은 장엄하고, 처절해서 아름답고, 그 뜻이 높아서 귀하고 거룩합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몸을 움크리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의 명예가 지켜지고, 또한 이 민족이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설혹 몸을 움크리고 있고 손발은 동상으로 얼었지만 여러분의 기개와 기상은 바닥에서 치솟는 한기로도 살을 에는 겨울 칼바람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 시리고 눈물 나는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호소합니다.

경제난과 정치혐오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진저리치는 정쟁의 한복판에서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탐대실의 정권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단식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오매불망 추구하고 계시는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 이 나라에 원칙과 정도(正道)가 서고, 의로움과 공정함이 흐르는 진정한 화합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민족에게 봉사할 마지막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8일

**기독교(목사 26명) 가나다 순**

김광수/김광준/김병균/김재열/김태현/나핵집/노창식/문대골/박승렬/박진석/원형은/윤인중/이근복/이명남/이철우/이충재/임광빈/임흥기/장성용/정진우/조영식/진방주/최자용/허종현/황남덕/황필규

**불교(스님 32명)**

금강/도현/만성/범상/범안/범장/부경/성관/여연/원종/원타/원혜/유곡/일문/장적/종선/종호/지명/지선/진만/진명/진원/청화/토진/한우/혜용/혜조/혜조/홍승/화범/효림

**원불교(교무 24명)**

강형신/고주심/김성혜/김인창/남성균/사진원/서현조/손현오/송용원/양영인/오광선/오정행/이덕도/이정근/이정택/이혜화/이환욱/정상덕/조성천/최정풍/한경천/한수덕/홍현두/황화경/

**천주교(신부, 수녀 60명)**

(신부)고원일/고정배/김병상/김봉술/김승오/김승훈/김영식/김인국/김진룡/김진화/김택암/김현영/김훈/나승구/남경철/남국현/남학현/리수현/문규현/문정현/박기호/박재식/박창균/박창일/방상복/백남해/서봉엽/신성국/안승길/안충석/유영일/윤영남/윤희동/이강건/이상돈/어상원/이상현/이영우/전종훈/정진호/조성제/최승근/최종수/하유철/함세웅 신부의 참석자 일동

(수녀)김선주/김아네스/김옥순/김인아/김현옥/문정숙/박승애/서영희/양골롬바/양비안네/이건춘/이경미/이선우/전영심/조희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원년이 소복히 내린 서울의 한복판 명동성당.

지금 명동성당의 차가운 진입로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비롯해 부정부패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이 농성에서 한 인권운동가(문만식/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탈수증세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여전히 농성현장을 지키고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전에 인권법과 관련한 개혁입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죽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연한 자세다.

지난 30일에는 이런 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이 자민련에 입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다른 당의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른 당으로 이적한 것이다. 민생현안을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임시국회의 회기 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 민주·인권의 실현을 호언장담해왔던 김대중정부가기에,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국민의 정부이기에 작금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 허울좋은 노벨평화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그늘에 가려진 각종 악법들의 개정에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회운영을 그만두고 민생현안과 인권 관련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결단하라!**

**여야는 인권 2대 법률의 조속한 개폐, 제정에 앞장서라!**

**여야는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라!**

**법무부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에서 손을 떼라!**

2001. 1. 2.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남부여성민우회/서울남서여성민우회/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민우회  
성남여성민우회/원주여성민우회/진주여성민우회/춘천여성민우회



**국제민주연대**

보낸 사람: "chulhyo kim" <ckim@dessex.ac.uk>  
받은 사람: <khis21@nownuri.net>  
보낸 날짜: 2001년 1월 9일 화요일 오전 7:56  
제목: 단식농성 지지서한 (영국 에섹스 대학)

안녕하십니까?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김철호라고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단식농성 지지서한을 보내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메일 전송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단식농성단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대**

수신: 국가보안법 철폐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단식 농성단  
발신: 영국 에섹스대학교 한국인 유학생들

폭력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노상 단식 농성을  
감행하신 인권활동가 여러분들께 지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희는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입니다.  
비록 타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늘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던 중,  
국가보안법 철폐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의 노상 단식 농성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여러분들께 작으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혹은나마 지지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동료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저희는 자부심을 갖기 보다는,  
50년이 넘게 여전히 남한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악법 국가보안법과  
보수세력에 의해 왜곡될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해  
비판적으로 역설해야 했습니다.  
남한을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인권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때로는 놀라면서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수였습니다.

비록 타국에 떨어져 있지만, 저희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열망과 투쟁은  
멈출 수 없음을 여러분들과 저희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인권활동가 여러분의 단식 농성을 충심으로 지지하며,  
멀리서나마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한국에서 그리고 타국에서도 이렇게 끊임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면, '국가보안법 철폐'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덧붙여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지극한 염려의 뜻을 전합니다.  
남한의 인권운동은 단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남한의 인권운동이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여기며,  
마음으로나마 다시 한번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 유학생들



- 김산 Department of Government, BA
- 김철호 Human Rights Centre, MA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 서영국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MA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 오수강 Department of Sociology, BA
- 유호선 Department of Government,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 윤창식 Department of Law, LLM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이승원 Department of Government, PhD Doctoral Programme in Ideology and Discourse Analysis
- 이진호 Department of Government, BA in Politics
- 홍선호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PhD

FROM:

Department of Government  
 Human Rights Centr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FROM:

Department of Government  
 Human Rights Centr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FROM:

Department of Government  
 Human Rights Centr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FROM:

Department of Government  
 Human Rights Centre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Department of Sociology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Governm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Language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3-12 삼공빌딩 3층 전화: 3142-0700 전송: 3142-1800 <http://www.ccdm.or.kr> 천리안·하이텔 CCDM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NGO 담당자 및 시민사회단체
- ◇ 발신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 성유보)
- ◇ 내용 : 인권활동가 명동성당 노상 단식지지 및 보도 촉구 2차 성명서
- ◇ 전송일자 : 2001. 1. 8. (월)

##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이 오늘로 열 이틀째 접어들고 있다. 단식이 계속되면서 농성단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단식 4 일째인 12월 31일 전북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문만식씨가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1월 5일에는 박래군 상황실장이, 1월 7일에는 60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단식에 동참했던 유가협 오염자 회원이 탈진하여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유해정, 최재훈씨는 탈진해 링거액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돈 공방'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언론은 단식 농성단의 소식은 외면한 채 정치권의 공방을 부추기기도 하듯 연일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시간을 정치권 다툼에 할애하고 있다. 한겨레, 노동일보,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 그리고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동아일보의 짝막한 보도 말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단식 농성단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해 말 명동성당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농성과 집회를 금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언론은 이 소식 다루기에 호들갑을 떨었다. 그 동안의 농성과 집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것처럼 보도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이며 무엇을 위한 언론인가? 그리고 엄중히 요구한다. 언론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과 이를 외면하는 야당 그리고 소아병적 이해타산으로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눈을 돌려라. 그 행태를 비판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인권활동가들의 목숨 건 단식농성을 보도하라. 언론은 이번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연합 노상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과제 2대원안의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이 순간까지 전개되고 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천막조차 세워지지 않은 노상에서의 단식농성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고통을 요구하고, 대다수 언론매체들의 외면은 외로움을 강요하며, 커다란 정치권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무의 현상을 인권활동가들은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식농성단 참가자들이 동상에 시달리고 탈수와 추위 등의 고통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의 의지를 확인하듯 농성참가자들의 대오는 나날이 늘어간다고 한다.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적 노력과 희생, 연대와 협력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시라 할 수 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해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을 철써같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을 뒤로 하더니 '민주개혁'을 위한 법 개·제정의 의지는 아예 실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러한 실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위한 '의원짜주기'라는, 정당사의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국민여론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반세기 인권탄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와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국가에서 인권활동가들의 목숨 건 노상 단식농성이라는 비극적 상황의 극복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라는 인권과세의 현실적 실종이라는 눈앞에서 마지막 불부림을 보여주는 인권활동가들의 연합 노상단식농성을 제주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포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정부여당 및 아당의 실천적 개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월 5일

(사)제주여민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시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민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경제성의실천시민연합, 제주사랑양용산업사추모사업회, 제주인권지기, 제주수민자치연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한국기독교장로회성년회제주연합회(이상 15개단체, 가나다순)



## 3대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명동성당 단식농성 인권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시대의 가장 뜨거운 양심으로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의 가슴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명동성당 단식농성 인권운동활동가들을 적극  
지지 한다. 또한 새로운 자각과 의지로 국보법 폐지와 개혁입법 운동  
에 나설 것을 각오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  
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개혁입법 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한다.

### 우리의 입장

1.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 반인권의 상징인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구호가 된 인권선진국가로의 실을 열어야 한다.
3. 부패방지법 제정의 지연은 정치인들의 부패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인은  
각성하고 즉각 개혁입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우리의 결의

1. 명동성당 단식농성 소식 홍보와 지역 차원의 지지를 결집한다.
2. 국보법 폐지와 개혁입법 제정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진개한다.

### 충북연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0-7 / 043-276-8940)



# 3대 개혁입법 산고를 대신 치르고 있는 명동성당 단식농성 인권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한다.

따뜻한 실내에 있음이 부끄러운 여러 가지 세상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3대 개혁입법을 국민 앞에 세우기 위해 흑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절규에 주목하며 지지와 연대성의 사랑을 보냅니다.

## 우리의 주장과 행동

- 하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반세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시오.
- 두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인권 후진국의 명예를 벗고 인권국가의 기쁨을 바로 하시오.
- 세엿. 부패방지법 제정을 늦추고 있는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즉각 개혁입법을 제정하시오.
- 네엿. 우리는 지역차원에서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모아 보낼 것이다.
- 다섯. 국보법 폐지와 개혁입법을 지인시키고 거부하는 모든 세력의 회개를 촉구하고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40-43 / 043-263-1225)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 LINE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천리안·나우누리 kwhl 하이벨 KWHL  
Tel. 2269-2962(대)/2237-1024 - 1027// Fax. 2237-1028  
5 Fl. Ulji Bldg., 236-509 Shindang 1-Dong, Jung-Ku, Seoul 100-451, Korea  
URL: <http://www.hotline.or.kr/> E-mail: [women@hotline.or.kr](mailto:women@hotline.or.kr)

수신: 청와대, 민주당대표실, 한나라당총재실  
발신: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해가 지나가는 시기에, 국회에서는 서로의 당리당략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은 새해의 각오와 희망으로 가득찬 이 시기에 그들이 추운 바닥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중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부터 약속한 인권위원회법과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약속이 또 한해를 넘기고 있고, 1월9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노벨평화상을 운운하기도 이제 어색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국민과 시민단체에 약속한 사안을 모른척하고,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진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각성하여 인권활동가들이 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3대 개혁입법 제·개정을 외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통해서 더 이상의 무능함과 무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하10도가 넘나드는 추운 날씨속에서 3대 개혁입법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강행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뜨거운 마음과 지지를 보내며, 김대중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인권활동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2001. 1. 5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인권운동사랑방

보낸 사람: "김중수" <young@kyc.or.kr>  
 받는 사람: <humanrights@sarangbang.or.kr>  
 보낸 날짜: 2001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5:31  
 제목: 지지 성명서입니다. 한국청년연합회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을 지지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과 사랑의 새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 인류와 함께 우리 국민들도 2000년 한해를 보냈다.

2000년 새해와 함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보다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다시 한번 더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기쁨도 잠시 정치권의 이진투구 개혁 실패와 함께 젊은 벤치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에 다시 한번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라는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연말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민족사적 쾌거를 달성하였다. 노벨 평화상 수상 후 귀국보고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세계의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1년 새해가 밝은 지금 명동성당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인권활동가들이 단식 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짓밟힌 인권유린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 통과를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다. 지난 11월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되고 건강하게 하는 3대 개혁 법안(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반부패법 제정) 제·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한 바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국민들의 촉구에도 정치권과 대통령은 귀 막은 채 복지부동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해 왔던 인권활동가에게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위원회 법안 제정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우리 청년들 또한 인권활동가와 인식을 같이하며 그들의 험난한 투쟁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같이하고자 한다.

우리 청년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굴하지 않고 노상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인권 활동가들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월 4일

한국청년연합회(KYC)



## 보도자료

2001. 1. 4. 11:00 (총 1장)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담당 기자

발신 : 이경희(李京喜, 39) 대변인 (675-6181, 휴대전화 011-346-8558)

제목 :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국가인권  
위를 만들어 국민을 따뜻하게 하라**

수은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이 엄동설한에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몸 하나 피할 천막조차 치지 못한 채 명동성당 차가운 땅바닥에서 8일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는 단식농성단의 유일한 먹거리인 식수마저 뚝뚝 얼어붙었다. 대한 추위보다 매섭다는 소한 추위에 모두들 옷깃을 여미고 따뜻한 곳을 찾아들고 있는 이 때 왜 이들은 얼어붙은 생수로 배를 채우며 추위와 맞서고 있는가. 누가 이들을 차가운 길바닥 단식농성으로 내몰았는가.

폐 일언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의 여망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북과 오고가고 있고 분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지금,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악용돼 왔던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인권과 평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킬 국가인권위원회를 실질적인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당연한 숙제다.

✓ 작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모두들 희망을 얘기했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또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새해 벽두부터 눈보라와 추위에 맞서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 우리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 소식을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식농성단과 우리가 느끼는 추위가 어찌 날씨 때문이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다.

거듭 촉구하건대,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의 삶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신속있는 국가인원위원회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하라.



&lt;성명서&gt;

**불교인권위원회**

서울 종로구 화동 138-12 삼청건축 3층 전화 734-6401 fax 734-6402

문서번호 01 1 4

발신 불교인권위원회

수신 가 언론사/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국보법철폐 단식을 지지하며**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 8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단식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흐름을 보고 우리의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의 노의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정치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독재 정권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인권대통령을 기다리며 嚴冬(엄동심한)에도 굶하지 않고 살아 왔다. 그러한 양심수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정치풀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치는 바로 국민의 힘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분명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은 지역감정에 침몰해 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지금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단식하는 모습을 외면할 것인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인들이여 외면하지 말라. 거대한 바다도 풀한 포기에도 의하여 파도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치인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바른 정치의 길을 걷기를 거듭 촉구한다. 허허벌판과 같은 곳에서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습 보라. 누구를 위한 단식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정치인들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역할은 디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돌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것은 하 부속히 결의해야하며 시민권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적 모습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명동성당에서 한파를 이겨 가면 단식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처절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든 시민권이든 한나라당이든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성찰해야 한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권국가를 염원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을 지지하며 이제 국민들이 나서 인권을 지켜내는 정치를 결행해야 한다. 만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현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 때 낙선시키는 운동에 우리는 나서야 한다.

2001년 1월 4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 관, 최지원, 한삼범



■성명서(충북여성민우회 회장 강혜숙, 043-273-1591)

### 3대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인권관련 법안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연일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는 우리들의 가슴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명동성당앞에서는 이러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권활동가들이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감히 춥다고 움츠러드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목숨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충북여성민우회는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고,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면 인권대통령이라는 칭호답게 인권문제는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식농성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에 기쁨을 함께 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이 이렇듯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한겨울 노상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약한 자의 인권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개혁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깊은 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50여년 동안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답게 인권관련 법안 입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올해가 인권보장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혁입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죽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연한 자세로 오늘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충북여성민우회는 다시 한번 뜨거운 동지애를 보냅니다.

2001년 1월 4일

충북여성민우회

##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12월 2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부정부패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은 영하 12도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노상단식농성 8일째.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1인지 두께의 스티로폼과 담요 몇 장으로는 노상의 칼바람과 냉기를 막지 못해 탈진하거나 링게르에 의존하고 동상에 걸린 사람이 나타날 정도이다. 이렇게 강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란 무엇인가.

반세기를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며 피폐하게 만들고 무수한 인권 침해들 자행하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인권위원회법 제정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공감할 표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절멸의 길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여전히 정지 상태에 있어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는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온갖 악법 개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저사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2001년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월 3일 13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3대개혁입법과 관련한 '긴급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악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는 '단지 말뿐만이 아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인권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급박하고 절실한 개혁입법을 남겨두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에게도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 입장을 편 바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민들의 염원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탄압을 자행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감시·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되는 참다운 세상이 민주화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된 안전지대에 살기를 소망한다.

2001년 1월 4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인권운동사랑방

보낸 사람: <tsmyr@jinbo.net>  
 받는 사람: <rights@chollian.net>  
 보낸 날짜: 2001년 1월 4일 목요일 오후  
 첨부: Myr0104.hwp  
 제목: [민의원]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el. 774-8774 Fax. 774-8773 / <http://myr.jinbo.net>

### < 성 명 서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라!

지금 명동성당에서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1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일주일 이 넘도록 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추위와 굶주림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즉, 2000년 인권의 2대 현안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기에 온몸을 던져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 실종된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 피해자라고 누차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의식해 존재한다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아래 수배생활을 하고 있고, 구속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앗아가는 반인간적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민중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즉, 현재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말살을 강압적으로 입막음하고 통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 속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작을 단순히 국회의 논란으로 무마시켜 버린 김대중 대통령은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각종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실종된 인권을 되찾으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야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인권을 불모로 자본과 정권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현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노숙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반인권·반인간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1. 국가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라!
1. 법무부는 노동자·민중을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2001년 1월 4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3-12 삼공빌딩 3층 전화: 3142-0700 전송: 3142-1800 <http://www.ccdm.or.kr> 천리안·하이텔 CCDM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NGO 담당자 및 시민사회단체
- ◇ 발신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 성유보)
- ◇ 내용 : 인권활동가 명동성당 노상단식지지 성명서
- ◇ 전송일자 : 2001. 1. 3. (수)

## 인권활동가들의 생명을 구하자

### -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안통과를 요구하며 -

지난 12월 28일부터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은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명동성당이 천막농성을 금지해 이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속에서 노상투쟁을 하고 있다. 이미 몇 사람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누가 이들을 눈보라속 단식투쟁으로 내몰았는가.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폐지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짓밟힌 인권유린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통과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소아병적 이해타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바람을 무관히 짓밟고 말았고 인권운동가들은 혹한의 추위속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평화상 수상대통령이 나온 2001년 한반도에서 이 무슨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인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고 통일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국회의원들과 정당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노벨평화상 수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말인가.

우리는 또 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7일째로 접어든 인권운동가들의 단식농성 소식을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는가. 왜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중앙일간지에는 이들의 단식농성 소식이 세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인가. 언론에게는 '인권'과 '통일'문제가 하찮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알고싶다. 이들이 왜 몰아치는 눈보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인권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인류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다. 인권을 도외시 하고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연목구어와도 같다. 정부와 국회는 인권활동

가들의 생명을 건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 그속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위원회 법안통과를 위해 앞장서라. 그 길만이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그보다 모진 외면의 고통속에서 인권활동가를 구하는 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호소하는 바이다. 일일 단식농성, 동조단식이라도 함께 하지. 인권문제를 인권활동가들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지. 이들에게 따뜻한 동지애를 보여주자. 민연련도 오늘부터 9일까지 가능한 인원이 동조·릴레이 단식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총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1  
전화: 02-777-1111  
팩스: 02-777-1112  
홈페이지: www.dmu.or.kr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1  
전화: 02-777-1111  
팩스: 02-777-1112  
홈페이지: www.dmu.or.kr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1-1  
전화: 02-777-1111  
팩스: 02-777-1112  
홈페이지: www.dmu.or.kr



[한총련 성명서]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원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연합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또다시 국가보안법과 공존하는 한해를 살아야 하는가.

16대 국회는 인권활동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인권 2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 인권단체 활동가 16인이 '국가보안법 철폐·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2주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3일을 기점으로 벌써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문만식(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교육부장)씨를 비롯한 3명이 탈진한 상태며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훈(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씨 등이 링겔을 꽂은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을 재촉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동상의 고통에 시달리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현실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지난 해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벌인 사람이 얼마인가.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이 강제철거의 탄압 속에서도 2백일 넘게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대학생, 종교인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극우보수세력과 정치인을 제외한 한국사회 모든 계급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성당의 돌계단이 닳아 없어지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했다.

누가 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16대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일주일 앞 둔 오늘까지 단식단 앞으로 돌아온 정치권의 답변은 무엇인가. 노상에서 맞이한 새해 0시 30분, 첫 선물로 날아든 것은 한총련 대의원인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씨의 연행소식이였다. 민주당은 사회단체 인사들의 항의방문과 면담요청을 일거에 외면하며 아직까지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의 '국'자조차 꺼내는 것을 극렬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의 요구는 온 국민의 염원을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한총련이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국가보안법 철폐 여부를 묻는 거리투표에서 약 80% 이상의 국민들이 철폐에 도장을 찍었다. 그 동안 정부여당이 양치기 소년처럼 개정안을 들이밀며 여론을 호도하고 극우야당과 보수언론들이 반대해 나섰지만 민주화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전세계의 여론마저 들끓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위원회는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개정하겠다는 것이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모두 알맹이 빠진 기만극일 뿐이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온 국민이 인권 2대 법안의 향배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권을 논하며 남북대화과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정쟁과 권력암투로 날을 지새며 개혁입법안의 통과를 외면한 16대 정기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시간이 그간의 죄과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총련은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에 진심어린 존경과 지지를 표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은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1년 1월 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이 희 철)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종배·박상중·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박영선 기획실장, 홍석인 간사 : 723-4250 sihong@pspd.org )  
제 목 악법은 폐지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하라(성명서)  
날 짜 2001. 1. 4 . (총 2 쪽)

## 성명서

### 악법은 폐지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하라

- 인권활동가 연좌단식농성에 참가하며 -

1. 한 세기를 시작하며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새해 벽두를 맞이하였건만 이 엄동설한에 노상 단식농성이란 웬말인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2월 28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결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권활동가들의 연합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릴레이식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가보안법은 냉전, 분단시대, 독재정권의 산물이자 상징이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 악법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형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침해결과에 대한 구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온전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허울좋은 겹데기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온전한 국가인권위법 제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해 11월 말 국가보안법 폐지, 온전한 국가인권위법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바 있으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장식적 구호로만 외쳐온 김대중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
3.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차디찬 겨울의 추위에 얼어붙게 하고 노상에 쓰러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때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기다림의 대가는 실망과 좌절과 배신 뿐임을 새삼 확인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악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과 선언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폭넓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정략에만 골몰해 있는 정치권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4. 단식농성에 참가하면서 밝히는 우리의 결의는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그 토양을 기반으로 필요한 개혁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임을 선언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국민의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 3대 개혁입법 성실히 추진하라

혹한의 연말연시에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 중인걸 아십니까? 인권대통령의 나라에서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에 노상 단식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3년 내내 '개혁'을 외쳐왔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정권에 최후통첩을 보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개혁입법 추진에 지지부진한 '국민의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답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김대중 정권에 영원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만! 약속을 지켜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



## 국가보안법 폐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자유들!

인권대통령과 노벨평화상,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했던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인권피해자였다고 자랑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침해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활동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짓 약속이 있었을 뿐 지금껏 깜깜 무소식입니다.

수구보수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의식해서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환호했던 우리 모두가 범죄자입니까? 반국가세력의 수괴와 손잡은 대통령을 보며 박수를 쳤으니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협박장치입니다. 그래서 야당시절에는 국보법을 반대하던 김 대통령이 지금은 국보법을 애용하는 맛을 즐기는 겁니다. 반대자를 막무가내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그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자유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습니까? 그럼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아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책임있는 인권기구들!

국가기구를 축소해야 할 판에 웬 새로운 기구 타령을 하느냐구요? 이런 저런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해볼 데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 쓸모 있는 국가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약속한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법무부 등이 판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들먹이면 웬지 꼴뜨러운 데가 많은 그들이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간판을 단 기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이 독자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라

김대중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패 추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대형비리와 부패가 국민의 생명과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천없는 약속과 일회적인 사정작업으로는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절대로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제를 제외시키고 공직자윤리규정을 강령화하는 등 핵심적인 조항은 빠진 반쪽자리 법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마련했으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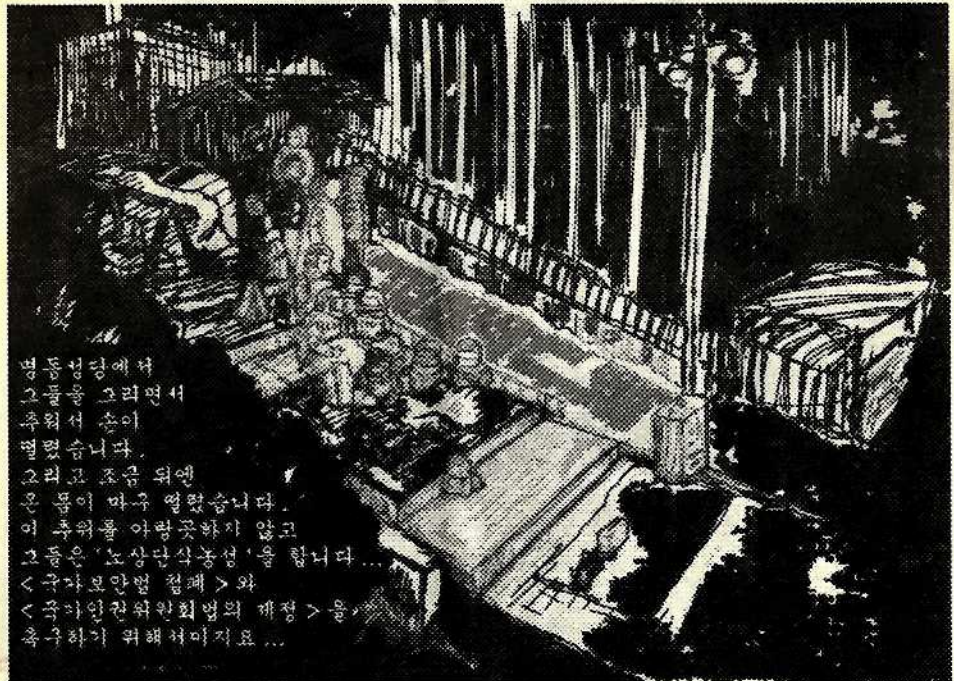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



# 인권대통령의 나라에서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에 노상 단식농성에 나섰습니다

혹한의 연말연시에 단식농성에 돌입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 민초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작 구조조정될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밥그릇만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속타는 국민들의 고통을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사지로 내몰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며, 그 권리를 목살하는 정권은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든 정치세력은 인권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한겨울 단식 농성에 나서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단식농성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계속됩니다.



인권대통령의 나라에서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에  
노상 단식농성에 나섰습니다.  
정작 구조조정될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밥그릇만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속타는  
국민들의 고통을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사지로 내몰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며,  
< 국가보안법 철폐 > 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까지요...

**거짓말은 그만! 약속을 지켜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인권활동가연합 단식농성단



## 국가보안법폐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자유를!

인권대통령과 노벨평화상,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했던 사람이 더 지독하다고, 인권피해자였다고 자랑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침해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활동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짓 약속이 있었을 뿐 지금껏 깜깜 무소식입니다.

수구보수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의식해서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럴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환호했던 우리 모두가 범죄자입니까? 반국가세력의 수괴와 손잡은 대통령을 보며 박수를 쳤으니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협박장치입니다. 그래서 야당시절에는 국보법을 반대하던 김 대통령이 지금은 국보법을 애용하는 맛을 즐기는 겁니다. 반대지를 막무가내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그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자유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외부의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습니까? 그럼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아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책임있는 인권기구를!

국가기구를 축소해야 할 판에 웬 새로운 기구 타령을 하느냐구요? 이런 저런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해볼 데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 쓸모 있는 국가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약속한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법무부 등이 판지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들먹이면 왠지 껄끄러운 데가 많은 그들이 인권위원회를 징악하려 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간판을 단 기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이 독자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김대중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패 추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대형비리와 부패가 국민의 생명과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천없는 약속과 일회적인 사정작업으로는 이 땅에 민연한 부정부패를 절대로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제를 제외시키고 공직자윤리규정을 강령화하는 등 핵심적인 조항은 빠진 반쪽자리 법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마련했으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꽃아지, 조국철권, 우리나라, 순병취,  
서기상, 이정열, 외양새





# 함께 합시다!!

# 항의 합시다!!

단식농성기간인 9일까지 매일 2시와 8시(춧불집회)에 단식 농성장인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월 6일(토)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 춧불음악회

때 : 저녁 8시

곳 : 명동성당 들머리(단식농성장)

출연진 : 김정환(사회)

꽃다지/최도은/박준/우리나라/손병휘/조국과 청춘

1월 7일(일)

## 집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때 : 오후 2시

곳 : 서울역

행진 코스 :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오후 5시 명동성당 집회)

1월 8일(월)

##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종교인 기원대회

때 : 오후 2시

곳 : 명동성당 들머리(단식농성장)

1월 9일(화)

##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때 : 오전 10시

곳 : 명동성당 들머리(단식농성장)

참여단체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부패방지법입법시민연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T 02 770 0027 F 02 770 0202

이메일 webmaster@cwd.go.kr

새천년민주당

대표실 T 02 784 2855 F 02 761 0550

이메일 webmaster@minjoo.or.kr

한나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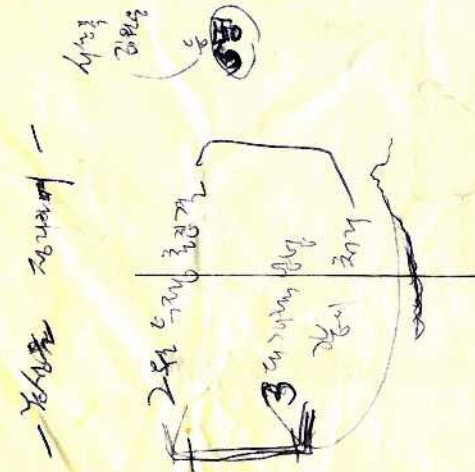
총재실 T 02 3786 3101~5 F 02 3786 3110

이메일 webmaster@hannara.or.kr

자민련

총재실 T 02 701 7871 F 02 701 7874

이메일 jamin@jamin.or.kr



인권활동가연담 단식농성단